

2013 전계층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 분석: 정책 수혜유형별 아동의 기관 이용 유형 및 언어발달에 주목하여

문지영¹⁾ 문희원²⁾

요약

본 연구는 2013 전계층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이후 정책 수혜유형별로 아동의 기관 이용 유형과 언어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 4차(2011년), 6차(2013년)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및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을 활용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책수혜집단별로 기관 이용 양상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확대지원집단 아동의 언어발달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보편적 복지 관점의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정책이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지점들이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 아동 언어발달, 교육 형평성, 이원고정효과모형, 한국아동패널(PSKC)

I. 서론

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성은 국가의 공공재원 투입과 양질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계획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최저의 유례 없는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도한 자녀양육비는 이러한 초저출산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왔다(시사저널e, 2024.03.11.). 이에 정부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일·가정양립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등의 목적으로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을 지속해왔다. 지난 정권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수를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 정부 역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

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차 해소'를 4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 유보통합과 놀봄학교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는 등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교육부, 2018; 2023).

무엇보다,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의 공공재원 투입은 꾸준히 확대 되어왔다. 2024년 기준 보육 및 교육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7.5% 상승한 3조 2,106억 원으로, 이는 유·초중등 교육 전체 예산 약 74조의 4.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교육부, 2023).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명목³⁾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2013년 이후 유치원 학비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소득과 무관한 무상 복지의 형태⁴⁾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되는 가정 양육수당 역시 전체 소득계층에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공공재원 투입 정도가 절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와 같은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은 도입 시기부터 정부의 여타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희석시키고,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된 바 있다(양미선, 2013).

이는 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른 종류의 다양성⁵⁾에 기인한 우려이다. 만약 기관의 질적 수준이 유사하다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아의 기관 이용 선택에는 큰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행정체제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만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적 특성, 물리적 환경, 교사의 교육과정 등의 질적 수준에 기관 간 차이가 존재함을 다수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다(김은설, 2013; 김은영, 2020; 정지아·장상옥, 2022; 최윤경, 2017).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 가구 소득, 모의 취업 여부 등이 아동의 기관 이용과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김기현·신인철, 2011; 박정미·이유신·오성은 외, 2023; 홍세희·노연경, 2017; Yesil-Dagli, 2011). 일부 연구에서는 초기 아동기 교육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기 시작한 누리과정을 기점으로 유아 보육·교육 기관 간 질적 차이가 완화되었다고 보기도 하였다(윤민중, 2020). 그러나 똑같이 누리과정 경험 출생 코호트를 분석 대상으로 한 임영신·최성수(2022)는 아동기 언어발달의 가족배경에 따른 격차는 어떤 보육 및 교육기관을 다니느냐에 의해 일부 설명된

3)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근거한다. 유아 학비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에 지원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지원되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2에 근거한다.

4) 2011년 이래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정책의 변천은 <부록 표 1>에 기술하였다.

5) 2024년 4월 기준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나뉘며 국공립유치원은 60.94%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뉘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22.97%임(교육부 유치원 알리미, 2024).

다 보고한다. 이는 유아기 언어발달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받으며, 장·단기적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해외 맥락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Burchinal, 2018; Camilli, Vargas, & Ryan et al., 2010; Hart & Risley, 1995; Raviv, Kessenich & Morrison., 2004; Pungello, Iruka & Dotterer et al.,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정책이 생애 초기 교육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인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수 선행연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간 및 재화 투자의 관점에서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의 효과가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지지하고 있다. 먼저,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3)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 후 유아 보육·교육비 지출 비용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보육료 지원액을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복지패널의 2011년, 2015년 자료를 통해 자녀양육비 지출의 변화를 분석한 이채정·권혁주(2017)는 양육비 지원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절감된 비용의 지출 양상은 소득계층별로 달라짐을 보였다. 저소득층 가구는 보육비용 지출이 높고 상대적으로 무상보육으로 인한 양육부담 경감 효과가 낮았으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높이는 양상을 보였다. 신유식(2020) 역시 아동복지패널의 2012, 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가 소득 상위계층 자녀교육 재투자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초기 아동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장·단기적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며, 그 효과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Goldfeld, O'Connor, & O'Connor et al., 2016; McMullin, Frances & Aisling et al., 2020; Rao, Sun & Chen., 2017; Xie, Near, & Xu et al., 2020). 이 외에도 해외에서는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이 자녀의 발달, 교육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Baker, Gruber, & Miligan, 2008; Havnes & Mogstad, 2011).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늘리는 유아교육·보육 공공성 확대 정책의 효과 분석은 주로 가구의 보육비 및 사교육비, 어머니의 노동 공급 및 출산계획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동의 기관 이용 양상의 변화나 아동 발달의 형평성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은 궁극적으로 정책수혜자의 기관 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 보육·교육 공공성 확대 정책 중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전 소득계층에 지급되기 시작한 2013년에 주목하여, 정책 수혜유형(기존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집단과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집단)별로 아동 보육·교육 기관 이용 양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기관 이용 의사결정 차이를 매개로 아동의 발

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 형평성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아 보육·교육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정책 수혜유형별로 아동의 기관 이용 양상에 차이가 발생하는가?

연구문제 2.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정책 수혜유형별로 아동의 언어발달에 차이가 발생하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4차(2011년) 자료와 6차(2013년)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 출생한 신생아를 모집단으로 양육실태, 아동 발달 특성, 육아지원기관 등 국가 수준의 종단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김은설·도남희·왕영희 외, 2012). 1차(2008년) 조사에서 2,150명의 가구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4차(2011년) 자료의 표본 유지율은 81.6%, 6차(2013년) 자료의 표본 유지율은 77.3%이다.

2011년(만 3세)에는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⁶⁾이 나이뿐 아니라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13년(만 5세)에는 전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2011년)와 6차(2013년) 표본을 활용하였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2011년에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정부의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11년은 표본 아동이 원칙적으로 어린이집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연령 2세에 해당하므로, 2011년에 어린이집 외에 다른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경우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외에도, 만 5세에 해당하는 2013년에 유아 보육·교육

6) 본 연구에서의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은 보육료, 유아학비,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보육·교육비 지원과 그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이라는 가정양육수당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전체 소득계층으로 확대된 시기와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보편적 지원 시기가 맞물려 있으므로 두 가지 정책의 영향을 엄밀하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와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를 종합하여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확대 정책'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비 혹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표본 가운데 부모와 아동의 특성, 수용어휘력, 육아지원기관, 정책수혜 여부 등에서의 결측이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대상은 1,115명의 아동이며, 이들의 2개 연도 응답을 바탕으로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하였다.

2. 주요 변수

본 연구는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정책 수혜유형에 따라 기관 이용 유형⁷⁾ 및 아동발달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변수는 <표 1>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의 종속변수는 아동의 기관 이용부담액과 기관 이용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아동의 기관 이용부담액은 각종 지원금을 제외한, 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연속변수이다. 이때 기관 이용부담액의 이상치(outlier)로 인한 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윈저화(winsorizing)⁸⁾하였으며(Kokic & Bell, 1994), 이후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아동의 기관 이용 시간은 아동이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총 시간⁹⁾을 의미하는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정책의 수혜유형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두 번째 연구문제의 종속변수는 아동의 수용어휘력¹⁰⁾을 측정할 원점수를 활용하였다.

-
- 7)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 유형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반일제 학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 유형의 기관에 주목하였다. 반일제 학원을 이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기관 이용과 관련한 금액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2013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역시 전체 소득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기관 이용 선택 역시 정부의 공공재정 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8) 정책 수혜유형별로 이상치의 범위가 다르기에 집단을 나누어 윈저화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상점의 상한 경계만을 고려하였으며, ‘3분위수에 1.5*IQR(Interquartile Range)을 더한 값’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 해당 값으로 대체하였다.
- 9) 한국아동패널 6차 조사에서 아동의 기관 이용 시간을 묻는 문항이 4차 조사와 달라졌음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4차에서는 ‘아동이 기관을 몇 시 몇 분에 가서 몇 시 몇 분에 돌아오는지’를 기관 유형별로 조사하였으나, 6차에서는 ‘하루 중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과 ‘아동이 일주일에 몇 번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지’를 기관 유형별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조사 시점에서의 문항 응답들을 바탕으로 기관 이용 총시간을 산출할 수 있었으므로 조사 문항 간 변화는 연구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10) 수용 어휘력 검사는 아동이 네 개의 보기 그림 중 검사자가 제시한 목표 언어에 해당하는 그림 한 가지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총 18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에서 아동이 연속해서 8개 문항을 맞추면 기초선이 설정되고, 연속한 8개 문항 중 6개를 오반응하거나 무응답하면 최고한계선이 설정되며 검사가 중단된다(김은설 외, 2012).

〈표 1〉 분석모형에 투입한 변수 설명

변수		설명
종속 변수	로그 기관 이용부담액	아동의 기관 이용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가구의 부담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단위:만 원)
	기관 이용 시간	아동의 기관 이용 총시간(단위: 시간)
	수용여취력 원점수	아동의 수용여취력 원점수
독립 변수	보육·교육비·양육수당 지원정책 수혜유형	확대지원집단(2011년 미지원, 2013년 지원)=1 계속지원집단(2011년 지원, 2013년 지원)=0
	시점	2013년(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이후)=1 2011년(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이전)=0
통제 변수	로그 월소득	가구의 월 평균 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단위: 만 원)
	모의 취업/학업 여부	어머니가 취업/학업 중인 경우=1, 그 외=0
	가구 구성형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1, 그 외=0
	거주지 규모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로 구분한 범주변수

주요 독립변수는 보육·교육비·양육수당 지원정책 수혜유형을 구분하는 더미변수와 시점을 구분하는 더미변수이다. 정책 수혜유형의 경우, 아래 〈표 2〉와 같이 구분된다. 2011년에는 보육·교육비,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지 않았으나 2013년에 새롭게 보육·교육비, 혹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은 아동을 '확대지원집단(=1)'으로, 2011년에 보육·교육비 지원을 받았던 아동을 '계속지원집단(=0)'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한 가구만 분석에 포함하였으므로 2011년에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¹¹⁾

〈표 2〉 보육·교육비·양육수당 정책 수혜유형 구분

구분	2011		2013		처치 여부
	교육·보육비	양육수당	교육·보육비	양육수당	
1	X	X	O	X	확대지원(=1)
2	X	X	X	O	
3	O	X	O	X	계속지원(=0)
4	O	X	X	O	
5	X	O	O	X	·
6	X	O	X	O	

11) 이는 2011년 기준 차상위 계층 중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가구 일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보다 불평등을 과소 추정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은 16명으로, 2011년 조사에 참여한 전체 표본 1,754명 중 0.91%에 해당한다.

시점 변수의 경우, 정책이 확대되기 이전인 2011년은 0의 값을, 정책이 확대된 2013년은 1의 값을 가지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주요 독립변수를 상호작용항을 분석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정책 확대 시행 전/후의 차이가 정책 수혜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 어머니의 취업/학업 여부, 가구의 구성 형태, 거주지 규모 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자세한 변수의 구성방식은 <표 1>에 기술하였다.

3. 분석 방법

아동의 발달은 아동이 누구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urchinal, 2018; Phillips & Lowenstein,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정책 수혜유형별로 아동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몇 가지 기술 통계를 살펴보고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한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식 (1)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서는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정책 수혜유형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검토하였으며, 식(1)의 모형과 아울러 식(2)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y_{it} = \alpha + \beta(TG_i \times After_t) + \gamma_1 X_{it} + \eta_i + u_t + \epsilon_{it} \quad \dots (1)$$

$$y_{it} = \alpha + \beta(TG_i \times After_t) + \gamma_1 X_{it} + \gamma_2 ECEC_{it} + \eta_i + u_t + \epsilon_{it} \quad \dots (2)$$

통상적으로 정책 수혜 여부에 따라 집단이 구분되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s)모형이 있다. 이중차분모형은 정책수혜/미수혜 집단의 특성과 시점 특성을 통제하는 이원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 모형의 특수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9). 본 연구에서는 반복측정 횡단면 자료가 아닌 개인 종단자료를 활용하므로, 표본의 크기가 서로 다름을 고려하여 표준오차를 추정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과 시점의 특성을 통제하는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식(1)의 종속변수인 y_{it} 는 t 시기 i 아동의 로그 기관 이용부담액, 기관 이용 시간 그리고 수용어휘력을 의미한다. 주요 독립변수인 TG_i 는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정책 수혜유형’ 변수를 의미하며, 정책 확대로 인해 새롭게 지원을 받은 집단(이하 확대지원

집단)의 경우 1의 값을, 기존부터 지원을 받던 집단(이하 계속지원집단)의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After_t$ 는 시점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2011년에는 0, 2013년에는 1의 값을 갖는다. X_{it} 는 <표 1>에 제시된 기타 통제변수들을 의미한다. η_i 는 개인 특성 오차항, u_t 는 시간 특성 오차항을 의미하며, 각각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개인의 고정된 특성과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시점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정책 수혜유형 변수와 시점 변수를 상호작용한 항의 계수인 β 의 추정치에 주목한다.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이후 확대지원집단 아동과 계속지원집단 아동 간에 기관 이용 양상 및 언어발달 변화 추세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아동의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정책의 내생성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011년에 보육·교육 기관을 무상으로 이용하던 계속지원집단은 소득계층 하위 70%에 해당하므로, 이때 교육·보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집단은 양육수당도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이처럼 정책 수혜유형은 가구의 소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본 연구에서 β 의 추정치가 유의하더라도, 그것이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정책으로 인한 결과인지,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한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못하더라도, 정책 시행 이후 시점의 집단 간 기관 이용 양상 및 아동의 언어발달 변화 추이를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보편적 복지 관점의 정책 시행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살펴볼 식(2)의 모형은 식(1)에 보육·교육 기관 이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을 추가로 통제한 것이다. $ECEC_{it}$ 는 첫 번째 연구문제의 종속변수인 로그 기관 이용부담액과 기관 이용 시간, 그리고 이용기관 유형을 의미한다. 이들 변수를 통제한 모형과 기존 모형의 추정치를 비교함으로써 지원대상 확대 정책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기관 이용 양상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가능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표본의 기술통계

<표 3>은 분석에 활용된 변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정책 수혜유형 및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전체 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 기관 이용에 대한 재정지원

이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되었음에도 2011년과 2013년의 기관 이용부담액 평균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용 시간 평균은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1시간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수용어휘력 원점수 역시 2011년 평균 33.48점이었던 것에 비해 2013년에는 58.98점으로 약 25.5점 정도 상승하였다. 이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어휘력 발달이 이루어진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가정 특성을 살펴보면, 월소득의 경우 2011년 전체 평균 대비 2013년 전체 평균은 약 35만 원 정도 증가하였다. 모의 취업/학업 여부는 약 3%p 증가하였으며, 가구 구성 형태는 평균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경우 읍/면 지역의 거주 비율이 4%p 줄어든 만큼 대도시의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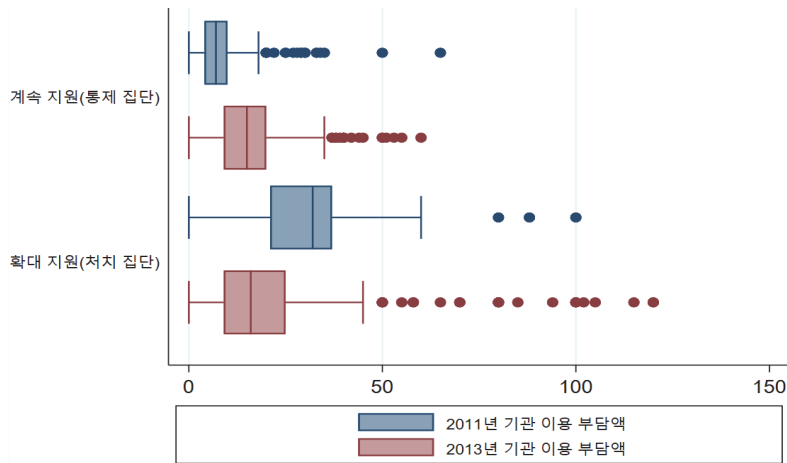
〈표 3〉 기술통계

변수	계속지원집단 (N=624)		확대지원집단 (N=491)		전체 (N=1,115)	
	2011	2013	2011	2013	2011	2013
기관 이용부담액 (만 원)	6.85 (4.57)	14.85 (9.05)	28.55 (13.55)	18.46 (13.03)	16.41 (14.44)	16.44 (11.12)
기관 이용 시간 (시간)	35.32 (7.44)	37.03 (6.67)	36.12 (8.55)	36.22 (7.53)	35.67 (7.96)	36.67 (7.07)
수용어휘력 원점수	34.36 (15.75)	58.72 (9.48)	32.36 (15.54)	59.32 (9.77)	33.48 (15.66)	58.98 (9.61)
월소득 (만 원)	334.6 (237.8)	369.3 (151.8)	471.73 (272.3)	506.07 (255.8)	394.98 (262.03)	429.51 (215.15)
모의 취업/학업 여부	0.38 (0.49)	0.44 (0.50)	0.53 (0.50)	0.53 (0.50)	0.45 (0.50)	0.48 (0.50)
가구 구성 형태	0.90 (0.30)	0.91 (0.29)	0.89 (0.31)	0.89 (0.31)	0.90 (0.30)	0.90 (0.30)
읍/면	0.24 (0.43)	0.17 (0.38)	0.17 (0.37)	0.16 (0.37)	0.21 (0.41)	0.17 (0.37)
중소도시	0.34 (0.47)	0.35 (0.48)	0.44 (0.50)	0.43 (0.49)	0.38 (0.49)	0.38 (0.49)
대도시	0.42 (0.49)	0.48 (0.50)	0.39 (0.49)	0.41 (0.49)	0.41 (0.49)	0.45 (0.50)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정책의 수혜유형에 따라 아동의 기관 이용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계속지원집단의 경우 2011년 대비 2013년의 기관 이용부담액 평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확대지원

집단의 경우 2011년 대비 2013년의 기관 이용부담액 평균이 낮아졌으며, 이는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수혜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여전히 확대지원집단에서 계속지원집단과 비교해 많은 금액을 아동의 보육·교육비에 투입하고 있었다. [그림 1]을 보면 계속지원집단과 확대지원집단의 2013년 기관 이용부담액 증위값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확대지원에서 더 높았고, 분포의 범위도 확대지원에서 더 넓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은 확대지원집단에서 아동의 보육·교육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기관 이용 시간의 경우, 2011년에는 확대지원집단이 평균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 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계속지원집단의 평균적인 기관 이용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평균 간 단순 비교 및 관계 분석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관 이용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1] 정책 수혜유형에 따른 기관 이용부담액 분포

주: 이상치의 값을 대체하지 않은 분포를 제시하였음

2. 정책 수혜유형에 따른 기관 이용 양상 변화

개인의 시간 불변 특성 및 기타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정책 수혜유형에 따라 가구의 기관 이용 양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4>의 모형(1)과 모형(2)의 종속변수는 각각 로그 기관 이용부담액과 기관 이용 시간이며, 시점 변수와 처치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통해 정책 수혜유형별로 종속변수의 변화가 어떠한지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모형(1)의 결과에 따르면, 시점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0.65였으며, 이는 계속지원집단의 2013년 기관 이용부담액이 2011년에 비해 65% 정도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의 영향을 받은 확대지원집단의 경우, 처치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1.11로 나타나, 기관 이용부담액이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 통제변수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모의 취업/학업 여부는 가구의 기관 이용부담액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점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1.30으로 나타나, 계속지원집단의 2013년 기관 이용 시간이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치 여부를 나타내는 상호작용 항의 계수 추정치는 -1.32였으며, 이는 계속지원집단에 비해 확대지원집단의 기관 이용 시간 변화분이 유의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두 계수 추정치의 값을 비교해 볼 때, 확대지원집단의 경우 기관 이용 시간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과 모의 취업/학업 상태의 변화는 가구의 기관 이용부담액뿐만 아니라 기관 이용 시간 역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기관 이용 양상 변화

	(1) 로그 기관 이용 부담액	(2) 기관 이용 시간
처치 여부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정책 수혜유형×2013년)	-1.11*** (0.07)	-1.32** (0.51)
시점 (2013년=1)	0.65*** (0.05)	1.30*** (0.35)
로그 월평균 소득	0.14* (0.08)	1.14* (0.58)
모의 취업/학업 여부	0.17** (0.07)	4.01*** (0.55)
가구 구성 형태	0.20 (0.14)	1.36 (1.02)
거주지 규모	0.04 (0.15)	-1.83* (1.10)
참조집단: 읍/면	0.01 (0.12)	0.52 (0.93)
대도시		
절편	1.34*** (0.47)	26.45*** (3.57)
<i>Observations</i>	2,230	2,230
<i>R-squared</i>	0.23	0.08
<i>Number of N_ID</i>	1,115	1,11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범례: *** $p < 0.01$, ** $p < 0.05$, * $p < 0.1$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책수혜유형별로 기관 이용 시간과 부담액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확대지원집단의 기관 이용 시간과 부담액이 유의하게 줄었음에도, 절대적인 기관 이용 금액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먼저, 아동이 만 5세 시기인 2013년에 어떤 기관을 이용하였는지 정책 수혜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표 5>에 따르면, 확대지원집단의 경우 계속지원집단에 비해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는 비율은 낮았고, 유치원이나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수혜유형에 따른 기관 이용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13년 기관 이용 분포 (단위: 명)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Total
계속지원집단	274 (43.91%)	346 (55.45%)	4 (0.64%)	624 (100.0%)
확대지원집단	188 (38.29%)	284 (57.84%)	19 (3.87%)	491 (100.0%)

Pearson $\chi^2(3) = 16.26$ Pr = 0.000

다음으로 동일 기관별 가구의 부담액 평균을 살펴보았다. <표 6>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계속지원집단과 확대지원집단 간 기관 부담액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보육료 상한 규제¹²⁾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유치원이나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는 계속지원집단에 비해 확대지원집단의 기관 부담액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확대지원집단과 계속지원집단의 경우 유치원과 반일제 학원 기관 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확대지원집단과 계속지원집단이 부담하는 비용 수준의 차이가 유아교육·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의 확대에 의한 것인지, 혹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책 시행 이후에도 수혜집단별로 기관 선택 양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가 최종적으로 아동 언어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2) 「영유아보육법」제 38조에 따라 정부 지원 보육료 외 추가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는 각 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수납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로 인해 지역별 학부모 부담 보육료의 차이는 평균 1.3만~6.3만 원 수준이나,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규제로 인해 보육기관 비용의 풍선효과 및 기관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최성은, 2016).

〈표 6〉 정책 수혜유형별 2013년 기관 이용 평균 부담액 (단위: 만 원)

	통제: 계속 지원		처치: 확대 지원		평균 차이 (계속 - 확대)	t
	N	Mean	N	Mean		
어린이집	274	12.42	188	12.60	-0.174	0.4713
유치원	346	16.70	284	20.53	-3.835	-2.7654***
반일제 학원	4	21.63	19	45.53	-23.901	-5.1753***

주: t 값은 기관 이용 평균 부담액에 로그를 취한 이후 t-test를 실시한 결과임

범례: *** $p < 0.01$, ** $p < 0.05$, * $p < 0.1$

3. 정책 수혜유형에 따른 아동의 발달

〈표 7〉은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이후 정책 수혜유형별로 아동의 언어발달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토한 결과이다. 모형(1)은 기본 모형으로, 기관 이용 양상과 관련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이다. 모형(2)에는 기관 이용부담액, 기관 이용 시간, 그리고 이용기관 유형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3)을 검토하였다. 앞선 결과에 따르면, 확대지원집단과 계속지원집단 간에는 아동의 보육·교육 및 양육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모형(3)은 모형(2)에 기관 이용부담액과 정책 수혜유형 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통제한 것이다. 기관 이용부담액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보육·교육 활동에 대해 지불할 의사(willingness to pay)가 있는 최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관 이용에 대한 가정의 수요 변화를 일부 대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형(2)를 통해 개인 내 기관 이용 양상의 변화가 아동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형(3)에서는 추가로 기관 이용 부담액의 변화가 정책 수혜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

〈표 7〉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정책 확대에 따른 아동의 언어 발달

		(1)	(2)	(3)
처치 여부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확대지원 × 2013년)		2.55*** (0.91)	2.98*** (1.03)	2.85*** (1.03)
시점 (2013년=1)		24.41*** (0.62)	23.42*** (0.84)	23.88*** (0.88)
이용 기관 참조집단: 어린이집	유치원	.	1.29 (0.92)	1.26 (0.91)
	반일제 학원	.	-1.02 (3.23)	-1.56 (3.24)

		(1)	(2)	(3)
기관 이용 시간		.	0.09 (0.05)	0.08 (0.05)
로그 기관 이용 부담액		.	0.28 (0.41)	-0.38 (0.57)
로그 기관 이용 부담액 ×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확대지원		.	.	1.33* (0.80)
로그 월평균 소득		-0.05 (1.04)	-0.18 (1.04)	-0.18 (1.04)
모의 취업/학업 여부		-0.47 (0.97)	-0.91 (1.00)	-0.93 (1.00)
가구 구성 형태		1.19 (1.82)	1.18 (1.82)	1.15 (1.82)
거주지 규모 참조집단: 읍/면	중소도시	-0.36 (1.95)	-0.25 (1.96)	-0.05 (1.96)
	대도시	-0.27 (1.65)	-0.39 (1.65)	-0.24 (1.65)
절편		33.17*** (6.36)	30.38*** (6.54)	30.13*** (6.54)
<i>Observations</i>		2,230	2,230	2,230
<i>R-squared</i>		0.75	0.75	0.75
<i>Number of N_ID</i>		1,115	1,115	1,11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범례: *** $p < 0.01$, ** $p < 0.05$, * $p < 0.1$

모형(1)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수용어휘력은 만 3세에서 만 5세가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수용어휘력의 향상 정도는 확대지원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지원집단의 수용어휘력 평균은 계속지원집단에 비해 약 2.55점 정도 더 높아졌다. 확대지원집단과 계속지원집단 간 어휘력 발달의 차이는 기관 이용 양상을 통제한 모형(2)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때 기관 이용부담액 및 시간을 통제함에 따라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확대지원과 시점 변수 간 상호작용항의 계수 추정치가 모형(1)에 비해 소폭 크게 나타났으나, 추가로 투입한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형(2)에서 확인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모형(3)의 결과, 확대지원집단에서의 기관 이용부담액 증가는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모형(3)의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확대지원과 시점 변수 간 상호작용항의 계수 추정치가 모형(1)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확대지원집단의 기관 이용 양상이 정책 수혜유형별 아동의 언어발달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일부 매

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정책수혜 이후 확대지원집단의 기관 이용부담액이 감소하였지만, 계속지원집단에서의 기관 이용부담액 변화가 아동의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달리, 확대지원집단의 기관 이용부담액 증가는 아동의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관 이용 양상 변화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정책 수혜유형에 따라 언어발달에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기관 이용 양상 변화 외에 아동 발달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이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하에 수행되었다. 이에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 이후 수혜유형별로 아동의 기관 이용 유형과 아동의 언어발달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주목하였으며, 정책 시행 이전인 2011년에 만 3세, 정책 시행 직후인 2013년에 만 5세였던 한국 아동패널 표본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과 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이중차분법을 수행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이후 정책수혜 집단별로 기관 이용부담액 변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던 계속지원집단의 기관 이용부담액 평균과 중위값은 아동의 만 5세 시기에 상승한 반면, 2013년부터 새롭게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을 받게 된 확대지원집단의 기관 이용부담액 평균과 중위값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누리과정 도입 후 아동의 교육·보육비 총액이 절감된 정도가 기존에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대도시지역, 고소득 계층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윤진·이정원·김문정, 2013)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관 이용부담액 수준은 여전히 계속지원집단에 비해 확대지원집단이 평균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확대지원집단은 2011년에 소득 하위 70%에 속하지 않아 정부의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확대지원집단과 계속지원집단 간 기관 이용부담액 수준의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소득 상위계층에서 아동의 보육·교육을 위한 지불 의사 금액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영옥,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이후 집단별 부모의 보육·교육기관 선택에 차이가 있다. 확대지원집단의 평균 기관 이용부담액은 계속지원집단과 비교해 더 많았던 반면, 평균 기관 이용 시간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만 5세가 됨에 따라 확대지

원집단과 계속지원집단 간에 이용하는 기관 유형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가 된 이후 확대지원집단은 계속지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유치원,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더욱이, 같은 유형의 기관이라 할지라도 확대지원집단의 기관 이용부담액은 계속지원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와 달리 유아기 보육·교육비 재정 지원대상 확대의 효과가 시설 이용 비용 감소에 제한적이며, 사교육을 포함한 시설 이용료 및 교육 비용 등의 가계지출이 유의하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은정·이혜숙, 2016; 이윤진·이정원·김문정, 2013; 정수지·박윤현·송지나 외, 2016;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집단별 기관 이용 형태의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부모들의 기관 이용에 대한 목적, 아동 보육·교육에 대한 가치관, 보육·교육 기관에 대한 효용 등 아동발달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는 아동보육·교육 기관을 선택할 때 대체로 비용, 위치, 부모의 근무 시간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rbst, Souza, & Al-Ashri et al., 2020).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보다는 가정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돌봄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Johansen, Leibowitz, & Waite et al., 1996).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연도별 기술통계에 따르면, 확대지원집단에서는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모의 취업 및 학업 상태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속지원집단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취업 혹은 학업 상태인 모의 비율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소득 고학력 여성의 아동 돌봄 시간은 교육·보육비 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이영옥, 2014)에 근거해 볼 때, 아동 양육을 위한 계속지원집단 모의 가용시간 감소가 아동의 기관 이용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 선택 양상의 차이는 향후 아동발달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이후 수혜유형별 아동의 언어발달양상을 이원고정효과모형 통해 분석한 결과, 아동의 언어발달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확대지원집단 아동의 향상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는 확대지원집단에서는 기관 이용을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할수록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관 이용 양상 변화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정책 수혜유형에 따른 발달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관 이용 외에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기제가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 발달에 있어 기관의 영향 외에 어떠한 기제가 작동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기관을 이용하느냐 뿐만 아니라 부모와

의 상호작용, 즉 가정에서의 보육과 양육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보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 교육·보육의 이원화된 행정체제로 인해 기관 간 질적·양적 격차가 존재한다(김은설, 2013; 김은영, 2020; 정지아·장상옥, 2022; 최윤경, 2017).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는 유아 보육 수요와 공급을 급증시켰으나, 그에 비해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부족하다고 지적되기도 했다(윤희숙·김인경·권형준, 2013). 따라서 초기 아동기에 발생 가능한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교육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사-아동 비율 및 운영시간, 인프라 등의 구조적인 측면과 교사-아동 간 상호작용의 질 개선과 같은 과정적 측면을 종합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원화된 유·보체제를 통합하고 연령 단계 별로 보육·교육의 체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하겠다.

둘째, 소득계층과 관계없는 일률적인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이 갖는 맹점이 논의되어야 한다. 공보육(교육) 체제가 강한 유럽 국가들도 주당 특정 시간대에 대해서만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득, 출생순위, 모의 취업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이영옥, 2015; 최성은, 2016). 그만큼 가정 배경에 따라 국가의 보육·교육비 지원의 효과가 다름을 고려한 것이다(McMullin, Frances & Aisling et al., 2020; Rao, Sun & Chen et al., 2017).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Goldfeld, O'Connor, & O'Connor et al., 2016; McMullin, Frances & Aisling et al., 2020; Rao, Sun & Chen., 2017; Xie, Near, & Xu et al., 2020)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률적인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방식과 구조에 대해 재고해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관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아동 보육·교육은 결국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기관 이용 양상의 변화를 통제한 이후에도 정책 수혜유형에 따른 아동 발달상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초기 아동 발달 격차 발생에 기관 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아동 발달 격차의 문제를 보육·교육 기관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의 교육·보육비 지원이 여성의 아동 돌봄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이영옥, 2014), 아동의 언어발달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함(박성덕·장연주, 2016; Dana, Christopher, Matia, 2016)을 고려할 때, 아동 발달의 차이가 기관 이용 외에 가정 내 상호작용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부모가 일·가정이 양립된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교육 지원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접근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정책은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확대 지원 수혜 여부 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소득효과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이 기존에 존재하는 소득계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아동의 언어발달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개인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고, 일부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으나, 이 외에도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기관 차원의 변인들을 각각도로 고려한 분석이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무상보육·교육이 시작된 2013년 기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무상화 정책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통한 기관 간 질적 차이 보완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구조 및 보육·교육 양상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시점까지 변화된 학령기 인구, 유아교육재정, 누리교육과정, 기관 이용 현황 등의 통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예측력 있고 효용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기관의 질적 차이가 현재 어떠한 수준인지는 실질적으로 부모들의 기관 선택과 유보통합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이 아동의 단기적인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나, 향후 아동의 장기적인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유아교육재정의 투입 형태와 규모에 따른 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질적 개선과 그에 따른 아동의 단기, 장기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기현·신인철(2011). 생애 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 유아교육 경험이 교육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1(4), 29-55.
- 김은설(2013). 유치원-어린이집 재정 지원 비교 분석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2020).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이혜숙(2016).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민인식·최필선(2019).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2판. (주) 지필미디어.
- 박성덕·장연주(2016). 부모,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2(2), 229-251.
- 박정미·이유신·오성은·허수연·김한성(202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SES) 와 유아 이용기관 선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5(3), 57-86.
- 신유식(2020).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대가 가구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육아정책연구*, 14(3), 79-102.
- 양미선(2013).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 사교육비 지출규모 변화.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3-16.
- 윤민중(2020). 유치원과 어린이집 효과 분석: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험이 아동의 인지발달과 학업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21(1), 1-20.
- 윤희숙·김인경·권형준(2013).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KDI FOCUS.
- 이영옥(2014). 여성의 시간배분 결정이 보육 및 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이영옥(2015).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KDI FOCUS
-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3). 5세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 지출비용 변화 분석: 2011-2012년 동일기관 이용 가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7(2), 166-189.
- 이채정·권혁주(2017). 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3), 175-198.
- 임영신·최성수(2022). 불평등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초기 아동기 인지능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가족배경 격차 추세. *한국사회학*, 56(2), 1-44.

- 정수지·박윤현·송지나·김대웅·이순형(2016).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계층별 유아 보육비 및 사교육비 변화: 무상보육정책 시행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7(2), 27-42.
- 정지아·장상욱(2022). 유아교사의 특성에 따른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실태. *인문사회* 21, 13(4), 1009-1024.
- 최성은(2016).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과 보육료 상한규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최윤경(2017). 유아보육·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현황 분석 및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강은진·조미라·조숙인·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홍세희·노연경(2017). 유아 사교육 시작 시점의 결정요인과 시작 시점이 이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검증: 혼합생존분석의 확장. *유아교육연구*, 37(3), 53-72.
- Baker, M., Gruber, J., & Milligan, K. (2008). Universal child care, maternal labor supply, and family well-be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4), 709-745.
- Burchinal, M. (2018). Measuring early care and education quality.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3 -9.
- Camilli, G., Vargas, S., Ryan, S., & Barnett, W. S. (2010).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early education interventions on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Teachers College Record*, 112, 579 - 620.
- Dana, M. G., Christopher C. H., & Matia, F. (2016).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12.
- Goldfeld, S., O'Connor, E., O'Connor, M., Sayers, M., Moore, T., Kvalsvig, A., & Brinkman, S. (2016). The role of preschool in promoting children's healthy development: Evidence from an Australian population cohor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5, 40-48.
- Hart, B., & Risley, T. R.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s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Havnes, T., & Mogstad, M. (2011). No child left behind: subsidized child care and children's long-run outcome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3(2), 97-129.
- Herbst, C. M., Desouza, K. C., Al-Ashri, S., Srivatsav Kandala, S., Khullar, M., & Bajaj, V. (2020). What do parents value in a child care provider? Evidence from Yelp consumer review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1, 288-306.
- Johansen, A. S., Leibowitz, A., & Waite, L. J. (1996). The importance of

- child-care characteristics to choice of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759-772.
- Kokic, P. N., & Bell, P. A. (1994). Optimal Winsorizing Cutoffs for a Stratified Finite Population Estimator.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10(4), 419-435.
- McMullin, Patricia, Frances McGinnity, Aisling Murray, & Helen Russell. 2020. "What You Do versus Who You Are: Home-Learning Activities, Social Origin and Cognitive Skills among Young Children in Irelan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6(4), 610-625.
- Phillips, D. A., & Lowenstein, A. E. (2011). Early care, education,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2, 483-500.
- Pungello, E. P., Iruka, I. U., Dotterer, A. M., Mills-Koonce, R., & Reznick, J. S. (2009).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race, and parenting on languag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5(2), 544.
- Rao, N., Sun, J., Chen, E. E., & Ip, P. (2017). Effectiveness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s in promoting cognitiv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ong Kong Journal of Pediatrics*, 22, 14- 25.
- Raviv, T., Kessenich, M., & Morrison, F. J. (2004). A mediational model of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three-year-old language abilities: The role of parenting fact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 528 -547.
- Xie, Y., Near, C., Xu, H., & Song, X. (2020).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on children's cognitive/non-cognitive skills: a reevaluation of an influential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Social science research*, 86, 102389.
- Yesil-Dagli, U. (2011). Center-based childcare use by Hispanic families: Reasons and predictor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7), 1298-1308.

[교육부, 보건복지부 자료]

교육부(2018).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교육부(202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교육부(연도별). 유아학비지원계획.

교육부(2023.08.29.). "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편성" 보도자료.

교육부(2024). 유치원 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보건복지부(연도별). 보육사업안내.

[보도자료, OECD 및 해외 자료]

시사저널 e(2024.03.11.). [저출산대책-1] 아이 울음소리 사라진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2024년 3월 30일 검색.

- 논문접수: 4월 8일 / 수정본 접수 5월 16일 / 게재 승인 6월 18일
- 교신저자: 문희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mhwh0926@snu.ac.kr

부록

〈부록 표 1〉 유아 보육·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정책 추진 과정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소득조건)	지원내용
2011	보육료	만 0~4세 (하위 70% 이하)	연령과 시간제(종일, 야간, 24시)에 따라 지원단가 상이 (17.7만 원~59.1만 원)
		만 5세 (하위 70% 이하)	17.7만 원 *시간 연장보육료 별도 지원
	유아학비	만 3~4세 (하위 70% 이하)	[국·공립유치원] 5.9만 원 [사립유치원] 17.7만 원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 이하)	10만원~20만원
2012	보육료	만 0~2세(전 계층)	연령과 시간제(종일, 야간, 24시)에 따라 지원단가 상이 (17.7만원~59.1만원)
		만 3~4세 (하위 70% 이하)	
		만 5세(전계층)	20만원 *시간 연장보육료 별도 지원
	유아학비	만 3~4세(하위 70%이하)	2011년과 동일
		만 5세(전계층)	[국립유치원] 5.9만원, [공립유치원] 3만원, [사립유치원] 20만원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 이하)	10만원~20만원	
2013~ 2016	보육료	만 0~2세(전계층)	28.6만원~59.1만원
		만 3~5세(전계층)	22만원~33만원
	유아학비	만 3~5세(전계층)	[국·공립유치원] 6(5)만원(3), [사립유치원] 22(7)만원
	양육수당	84개월 미만(전계층)	10만원~20만원
2017~ 2022	보육료	만 0~2세(전계층)	25만원~64.5만원
		만 3~5세(전계층)	22(7)만원~33(7)만원
	유아학비	만 3~5세(전계층)	[국·공립유치원] 6(5)만원, [사립유치원] 22(7)만원
	양육수당	84개월 미만(전계층)	10만원~20만원
2023~	보육료	만 0~2세(전계층)	37.5만원~51.4만원
		만 3~5세(전계층)	28(7)만원
	유아학비	만 3~5세(전계층)	[국·공립유치원] 10(5)만원, [사립유치원] 28(7)만원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추가 학비 지원
	양육수당	84개월 미만(전계층)	10만원~20만원

주: (1) 유아학비 지원의 경우 기본지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농어업인의 자녀, 맞벌이 가구, 다문화·난민가정의 지원대상 조건과 산정 기준 및 금액에는 차이가 존재함 (2) 국·공립유치원은 2013년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됨 (3) 지원 내용의 괄호 안은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액을 의미함. 이하 동일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11~2014, 2017) 보육사업안내, 교육부(2011~2013, 2017, 2023) 유아학비지원계획 바탕으로 저자 작성

Abstract

Analysis of the 2013 Policy for Expanding Early Childcare, Education, and Child-Rearing Cost Support for All Classes: Focusing on Institutional Types and Language Development

Jiyoung Moon, Heewon Mo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ypes of institutional use and language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policy beneficiary, following the 2013 expansion of support for childcare, education, and child-rearing costs for all classes. To achieve this, we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using a two-way fixed effects model based on the 4th (2011) and 6th (2013) wave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use patterns among the policy beneficiary groups. Specifically, children in the expanded support group demonstrated a more positive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that the universal welfare approach to childcare and education cost-support policies should be reconsidered in terms of educational equity.

Keyword: Expanding public funding for ECEC, Children language development, Educational equity, Two-way fixed effect model, Korean Children's Panel Study